

# 신앙과 경제윤리

Christian Faith and Economic Ethics

조용훈

- I. 서론
- II. 신앙과 경제
- III. 경제와 윤리
- IV.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일반원리들과 문제점
  - 1. 현실 사회주의 붕괴와 자유주의 시장경제
  - 2. 시장경제의 일반원리들
  - 3. 시장경제의 문제점들
- V.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위한 윤리원칙들
  - 1. 인간적 원칙
  - 2. 민주적 원칙
  - 3. 사회적 원칙
  - 4. 생태학적 원칙
  - 5. 지구적 평등원칙
- VI. 맺는말

## Abstract

In the past time, only a few the Korean churches and theologians were interested in the subject of economic ethics. This has many causes: the development of the dictatorship and duration of the military regime, theological dualism of faith as a spiritual problem and economy as secular, and the deficient knowledge of the theologians in the social science like economics etc. The current crisis of the economy forces theologians, to analyze the problems of economy from the theological perspective and to suggest alternatives.

In this paper, I stress the meaning and the importance of the christian faith in the formation of a sustainable economy. Economy is the area in which the lordship of Christ is realized, and the concern on the poor is the crucial missionary task of churches today. More important is the problem that the free market theory functions as a new ideology and a psuedo-religion.

Thus, I present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free market theory and a criticism of it's fundamental values from the theological perspective. I also discuss the misunderstanding of the free market, 'external effect' such as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problem of the incomplete competition etc.

In conclusion, I propose the ethical guideline for the formation of the sustainable economy. First, the 'humane principle' of economy aims to understand human life as a goal, not a means of the economy. Second, the 'democratic principle' of economy aims at a decentralization of economic power through the demoratiz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capital. Third, the ‘social principle’ of economy aims at solidarity and equali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Fourth, the ‘ecological principle’ of economy means a harmony between the environment and economy. Lastly, the ‘global justice principle’ of economy means a realization of the global justice through reducing the gap between the developed states and underdeveloped.

## I. 서론

그 동안 한국 교회와 신학은 경제문제에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5.16군사정권의 등장과 유신체제 및 개발독재정권으로 인한 비인간화의 현실에서 노동자의 인권과 정치적 자유권, 민주주의 등의 정치윤리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다.

경제문제에 대한 한국 교회와 신학의 무관심에는 이러한 외적인 원인 이외에도 내적인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잘못된 이원론으로 인해 신앙과 물질생활이 무관하다고 생각했으며, 더 나아가 물질세계를 악마시함으로써 결국 경제를 타락한 인간 이성의 영역에 내맡겨 버렸다. 둘째, ‘경제성장의 시대’의 혜택 속에서 가진 자와 가까웠던 한국 교회의 풍토 역시 민감한 사안인 경제문제에 대한 언급을 제한했다. 셋째, 교회지도자들의 경제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와 시장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의 역사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우리 나라는 상업과 수공업업 천시하였으며,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상행위를 비인격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시정아치’, ‘시정잡배’(市井雜賸)라는 말 속에는 시장이 비도덕적이라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외환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제문제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IMF체제 아래서 국민의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를 유일한 대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시장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으며, 특별히 세계시장의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경제문제에 대한 신학적 비판과 숙고가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 II. 신앙과 경제

경제문제가 신학적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경제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역시 경제행위의 주체로서 경제행위를 하며 살아간다. 때로는 소비자로서, 노동자나 사원으로서, 자본가로서, 기업경영인으로서, 노조원으로서 혹은 실업자로서 경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바로 경제문제다. 한편 교회 역시 현금의 관리나 운용, 교회재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교회 직원 등과 관련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경제분야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다. 창 1:28-30과 창 2:15에 나타나는 ‘문화위임’(Kultur Mandat)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경제(economy)의 그리스어 어원은 ‘집’ 혹은 ‘가정’을 나타내는 *oikos*와 ‘규칙’ 혹은 ‘법’을 뜻하는 *nomos*가 결합된 것으로, 한 집안의 살림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지기’(*oikonomos*)라는 단어 역시 이 경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경제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이 성취되도록 책임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셋째, 경제영역은 오늘날 기독교의 사회선교의 영역 중에서도 긴급한 과제에 속한다. 이는 한 사회의 적지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절대빈곤의 상황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절대빈곤으로 인한 비인간적인 상황은 단지 경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한 종교적인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사회적 약자들, 특히 가난한 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록 성경에는 가난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생존권을 보호하신다는 것과, 가난을 강요하는 부자들의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문제삼고 있다는 것이다.<sup>1)</sup>

넷째, 경제주의가 현대사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다. ‘경제주의’란 사회생활의 모든 현상들을 주로 경제합리적인 것과 물질적 생산성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써, 경제 그 자체가 자연법칙처럼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의 판단기준으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경제인’(homo ökonomicus) 혹은 ‘소비인’(homo consumens)으로 규정된다. 경제인이란 물질적 욕망 충족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경제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다. 소비인이란 인간을 물질의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만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일차원적 존재다. 이들에게서는 돈과 재화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목적 그 자체가 됨으로 결국 물신숭배에 빠지고 만다.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도 경제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적 가치관은 단순히 경제영역에서만 아니라 교육영역을 포함하여 사회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경제의 이데올로기화로써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난다. 부루너(E. Brunner)가 주장했듯이 “섬김, 삶의 섬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의 우선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sup>2)</sup> 경제는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

1) Hoppe, L., 나요섭 역, 「성서에 나타난 가난」, 나눔사, 1992.;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분도출판사, 1979.

2) Brunner, E., *Das Gebot un die Ordnungen*, 4.Aufl. Zürich 1978, s. 387.

니다. 경제가 스스로의 목적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결국 인간을 비인간화 시킴으로써 악마적이 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가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거나 가난 자체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질(質)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인간이 경제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경제를 통해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의 우상종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예수에게 있어서 부의 문제는 단순히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즉 부가 맘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마 6:24). 그렇다면 종교적 최악이란 경제적 관점을 절대화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같은 경제의 힘에 대해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3)</sup>

마지막으로, 모든 경제의 성공 여부는 욕구의 안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종교적 관심사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경제학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경제인이나 소비자의 욕망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데에만 목적을 두기 때문에 몰가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세열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이 회소성의 문제와 무한한 인간의 욕망 문제를 그저 주어진 것으로서, 어찌할 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가정(implicit assumption)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건 말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또 무한히 충족될 수 있다고 믿으며, 무제한한 인간 욕망의 윤리도덕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학자가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이를 외면하고 경제학에서 이 문제는 제외시켜 버린다.<sup>4)</sup>

3) Kirchenamt der EKD, *Gemeinwohl und Eigennutz, Wirtschaftliches Handeln in Verantwortung für die Zukunft*, Gütersloh, 1991, s. 110.

4) 김세열, 「경제윤리」, 한남대학교 출판부, 1985, pp. 68-69.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인간욕망이란 한이 없다는 데서 생겨난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란 주관적이어서 행복의 객관적 척도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문제는 윤리적, 정신적 가치관의 문제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경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정신적, 영적인 문제이다. 바로 이 점에서 신학의 공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물질의 소유와 소비에 대한 탐욕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한다(눅 12:13-21, 딤후 6:10, 히 13:5 등). 오늘날 우리 사회가 생산력의 증대를 통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풍요로운 삶에 이른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수요와 욕망이 물질생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 성취와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가난, 즉 금욕과 절제의 덕목이 새롭게 요청된다. ‘반금욕적 문화’<sup>5)</sup>를 특징으로 하는 대중소비사회시대인 우리 시대에 금욕과 절제의 가치관에 기초한 대안적인 소비생활이야말로 새로운 문명창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물론 금욕과 절제가 중세시대에서처럼 구원을 위한 업적으로 신화화되어선 안된다. 금욕과 절제는 구원의 조건이나 담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난한 이웃, 가난한 저개발 국가들 그리고 창조질서 보전을 통한 미래세대의 생존을 배려하는 보다 사려깊은 윤리적 덕목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금욕과 절제는 풍요로운 선진국 국민과 경제적 여유 속에 있는 소비계층에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덕목임이 틀림없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덕목이다. 하지만 자발적 가난과 강요된 가난이 혼동되어선 안된다. 강요된 가난은 반드시 타파하고 극복해야 할 사회적 악이기 때문이다.

5) von Weizsäcker, C. F., *Deutlichkeit. Beiträge zu politischen und religiösen Gegenwartsfragen*, München/Wien, 1978, s. 74.

### III. 경제와 윤리

흔히 사람들은 경제학이란 몰가치적이며 윤리적 몰음과 관련이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제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경제학에 대한 생각은 최근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중세기까지 경제학은 도덕신학이나 도덕철학의 과제에 속했다. 아담 스미스(A. Smith)나 존 스튜어트 밀(J. S. Mill)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표자들 대부분이 도덕철학자들이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경제적 이기심에 기초한 자유방임이 사회적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도덕감정론」에서 인간이 도덕적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을 그처럼 이기주의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그의 본성에는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동참하도록 인간을 규정하는 특정한 원리들이 있다 … 이같은 원리가 곧 자비심 혹은 동정심이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비참을 보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묘사되어 우리가 그것을 추체험할 수 있게 되자마자 느끼는 감정이다.<sup>6)</sup>

여기서 인간의 도덕감정이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동정심, 즉 연대적 행동(Solidarität)을 의미한다. 다만 그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점은 사회의 추구하고 공공복리의 상관성을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 찾으며, 이해관계의 조정 역시 자연적 질서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점이다. 당위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 그는 경제에 나타나는 개인악과 구조악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인간학적·경제학적 낙관주의에 빠지고 만 것이다.<sup>7)</sup>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는 시종일관 시장이 도덕성에 기초하여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6) Rich, A., 강원돈 역, 「경제윤리 2」, 한국신학연구소, 1995, p. 307 재인용.

7) Rich, 위의 책, p. 310.



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경제와 윤리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와 도덕성을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이 둘은 줄곧 분리되어 파악되었다.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에 의하면 경제는 자율적인 것이며 불가치적인 것이다. 경제의 모든 것은 경험적·합리적인 이성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규범성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윤리적 물음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경제학자 사무엘슨(P. A. Samuelson)이 말한대로 모든 경제는 무엇을 어느 만큼 생산할지(생산 품목과 양), 어떻게 생산할지(생산의 방법)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지(생산의 대상)라는 세 가지 물음을 다루는데, 이 세 가지 물음 속에는 이미 윤리적 의미가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다.<sup>8)</sup> 예컨대 ‘무엇을 어느 만큼 생산할 것인가’란 물음은 인간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욕망에 따라 필수품을 생산할 수도 있으며, 마약이나 군수품 같은 반사회적인 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 즉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재화를 생산해도 괜찮은가 하는 물음은 바로 윤리적 물음이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란 물음에서 중요한 경제원칙은 효율성이다.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이라는 생산요인을 어떻게 투입하고 활용하여 최대의 효용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물음인데, 여기서 노동의 문제가 바로 윤리적 물음의 핵심을 이룬다. 왜냐하면 인간은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다루어져서는 결코 안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분배와 할당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윤리적 물음이다. 사회적 총생산을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사회적 총생산에 공헌하지 못한 사람, 즉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계층과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작은 계층의 생존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처럼 모든 경제정책과 경제체제의

8) Rich, 위의 책, pp. 173-183.

기저에는 일정한 가치체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윤리가 필요하며, 신학은 바로 그러한 가치체계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경제는 하나의 힘으로서 인간과 사회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소유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자들의 태도나,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에 대한 IMF의 요구는 거역하기 어려운 힘으로 작용한다. 경제력의 집중에 의한 경제권력은 그것의 사용에 있어 남용될 위험이 상존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빈곤이라는 것이 단지 개인의 나태함이나 무능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다. 불의한 경제제도와 불균등한 세계경제질서와 같은 잘못된 경제적 힘의 사용에 의해서 빈곤이 강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자연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래세대의 생존도 좌우한다. 이처럼 경제행위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보다 더 책임적이어야 한다.

셋째, 사람들이 경제를 윤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가 자연법칙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위해 생겨난 사회문화적 현상이라고 생각할 경우, 경제와 윤리는 전혀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다. 사실 이윤추구와 경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한된 재화를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할 때 인간 삶이 풍요롭게 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이다.

경제의 의미와 목적은 경제 자체의 존재로부터만 규정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인간'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가 있고, 시장이 존재하는 까닭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인간 욕구의 충족과 만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는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배경에서 신학의 과제는 경제의 고유한 원리들, 예컨대 효율성, 계획성, 경쟁의 원리, 사익추구의 원리 같은 경제의 '자기법칙성'(Eigengesetzlichkeit)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간, 사회 그리고 환경에 부합하는가

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우선 경제의 자기법칙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경제야말로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사회의 복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의 자기법칙성이 절대화될 때 인간과 사회는 수단화된다. 따라서 경제의 자기법칙성은 인간과 사회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비판되어야 한다.

물론 기독교윤리학의 과제는 현존하는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데 있지 않다. 예로써 시장경제 원리가 원칙적으로 비윤리적이거나 악마적이라든지, 반대로 절대불변의 이상적 경제원리라고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실 시장경제에 대해서 두 극단적인 입장이 있다. 하나는 시장경제야말로 효율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인류를 빈곤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 낙관적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경제는 인간과 자연 생명을 파괴하는 악마적인 것이라고 믿는 비판적 입장이다. 이같은 시장경제의 우상화나 악마화는 결국 시장경제를 신화화시킴으로써 시장경제를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며, 결과적으로 시장경제를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약화시키고 만다.

#### IV.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일반원리들과 문제점

##### 1. 현실 사회주의 붕괴와 자유주의 시장경제

80년대 말 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전까지 두 가지 상호 대립되는 경제체제가 경쟁관계 속에 유지되었다. 하나는 사회주의 중앙관리경제 체제요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이다.<sup>9)</sup> 경제를 계획하고 통

9) 스위스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자 아르투어 리히의 관점에 따라 일반적인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로 구분하는 대신에 시장계획의 주체와 특징을 따라 '시장지향적'인 계획방식과 '중앙집중적' 계획방식으로 구분한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도 계획이라는 모티브와 무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Rich, 위의 책, p. 235).

제하는 주체가 전자는 국가인 반면에 후자는 개별적인 기업이다. 전자가 국가경제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면 후자는 시장경제적이고 탈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집단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근본적 가치로 삼는다면 후자는 사익추구와 경제적 자유를 근본 가치로 삼는다.

하지만 이제 경제체제에 대한 논의에서는 과거와 같은 사회주의 중앙관리경제 체제나 아니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나 하는 선택의 물음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몰락과 더불어 중앙관리경제 체제도 무너지고 말았다. 오늘날 경제영역에서의 고도의 전문화와 그에 따른 분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 중앙관리경제 체제의 몰락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각 개인이 어떤 재화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어떤 재화를 어떻게, 얼마큼 생산해야 할지, 그리고 그 생산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하는 경제의 제반 정보들을 국가가 계획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마저도 순수계획경제에서 후퇴하고 있다. 동구권의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이 시장경제를 실험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하고 있다. 바야흐로 시장경제 체제는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경제제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가 곧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공공복리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대한 이념을 무가치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인류의 비전은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끊임없이 되묻고 새롭게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이제 경제논의의 핵심은 과연 시장경제 체제를 어떻게 인간적이고, 사회적이며, 환경친화적이고, 국제적 차원에서 정의롭게 형성할 것이냐 하는 데 있다. 물론 그 실현방법을 둘러싸고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민주주의적’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체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형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라 할 수 있다.

## 2. 시장경제의 일반 원리들

시장경제는 운영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대체로 다음 몇 가지 기본원리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첫째, 시장의 자율성 원칙이다. 시장경제는 시장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전제한다. 예를 들면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취업에 있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시장경제에서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제반 결정들은 가계나 기업 같은 수많은 개별적인 경제단위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제적 이윤은 경제행위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 경제주체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며, 손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경제주체에게 내리는 벌이 된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제는 치안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질서유지에 국한된다.

둘째, 사익추구의 도덕적 정당화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개인의 경제적 이윤추구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며, 그것이 곧 공동선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국의 영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본을 투입하고 그 영리활동을 관리하여 자신의 소득이 최대한의 가치증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이 노력한다면, 각 사람은 또한 어쩔 수 없이 연간 국민소득이 가능한 한 많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 그리고 그는 다른 많은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받아 그가 그 실현을 결코 의도하지 않은 어떤 목적을 실현한다.”<sup>10)</sup> 한편 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음식을 얻게 되는 것은 정육업자나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호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업자들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 때문이다.”<sup>11)</sup> 물론 개인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도 사회의 이익에 모순되지 않는 사회는 분명히 하나의 이상이다. 다만 아담 스미스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시장제도야말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

10) Rich, 위의 책, p. 246 재인용.

11) Kirchenamt der EKD, 위의 책, s. 38.

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이상에 가까운 제도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를 보면서 사익추구의 인정이 사회발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아담 스미스가 사익추구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자기이익을 절대화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시장경제를 조정하는 매커니즘은 경쟁이다. 시장경제는 정부의 개입 없이도 경제주체들 간의 정당한 경쟁을 통해 견제되고 균형을 잡는다. 그런 의미에서 경쟁은 헨젤(K. P. Hensel)의 주장대로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정책의 지도원리”<sup>12)</sup>라 할 수 있다. 경쟁의 원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난 업적을 보이는 경제주체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 경쟁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 기술의 발전, 효율성의 증대가 실현된다. 뿐만 아니라 경쟁은 경제력의 집중을 어느 정도 방지하며 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넷째, 시장경제의 매커니즘은 수요와 공급의 만남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이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그 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어떤 재화에 대한 욕구가 크고 희소성이 높으면 자연히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윤에 관심하는 생산자들이 공급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결국 가격이 다시 내려가게 된다. 이러한 조정 매커니즘이 국가의 개입 없이도 경제의 주체들을 규율한다. 따라서 각 경제주체가 가격만 바라보고 그것이 말하는 것에 따라 행동한다면 사회적 조정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시장경제의 가격 매커니즘은 시장에 대한 제반 경제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를 조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게 만든다.

### 3. 시장경제의 문제점들

사회주의 중앙관리경제 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우위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시장경제 체제가 ‘절대적으로’ 좋

---

12) Rich, 위의 책, p. 243 재인용.

은 경제체제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 도처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인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 역할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 중에서 우선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자유에 대한 오해다. 시장의 자유란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와 같은 잘못된 국가의 간섭배제를 의미한다. 만약 시장경제가 경제주체들 간의 적대적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사회 자체를 붕괴시키지 않으려면, 시장의 자유는 정당하고 적절한 형태의 구속력 있는 사회적 규제장치를 여전히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상호보완적이며 상호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장경제가 자율적이라 함은 경제주체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자신들의 결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기업의 의사결정은 더 신중해질 것이며, 생산성과 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다. 과거 우리 나라 재벌정책의 경우처럼 국가나 일반국민이 경영실패의 책임까지 떠맡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자유가 만인의 자유는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시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소유권을 가지고 구매력을 가진 사람뿐이다. 소비자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생산자에 의해 제한되고 침해되고 있다.

둘째, 시장경제는 인간의 수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그것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 욕구가 인간과 사회 삶에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문제삼지 않는다. 기업이 광고를 통해 인간 삶에 꼭 필요하지 않은 그리고 때로는 해가 되는 욕구들을 불러일으키며 소비에로 유혹하거나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모든 욕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가? 또한 시장경제는 개인의 욕구에만 관심을 가질 뿐 사회의 욕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재화나 사회간접자본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이윤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범죄문제나 교통문제, 항만이나 도로, 공원시설, 환경문제 등은 공공재화로서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셋째, 시장경제는 이른바 ‘외부효과’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는 중앙관리경제 체제보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기구의 능력은 생산 및 소비활동이 영위되는 ‘경제계’ 안에서만 발휘될 뿐, 경제계를 넘어서 자연자원의 채취 및 환경오염물질의 투기를 포함하는 ‘환경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서 발생한다.<sup>13)</sup> 시장기구가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를 ‘외부효과’(external effect)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경제주체가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3자나 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외부’란 경제적 수지계산 밖이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시장기구는 재산권이 설정되고 집행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만 유효한데, 환경자원은 아무런 대가지불이나 보상이 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원의 오용·과용·남용 등이 나타난다. 이처럼 환경오염의 비용은 사회 전체적으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괴리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익의 추구가 곧 공공복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히 긴장이 존재한다.

넷째, 불완전경쟁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생활을 파괴할 수도 있다. 사실 경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그러나 시장경제론자들이 주장하는 완전경쟁의 이념은 현실의 경제적·기술적 발전 조건 아래서 너무나 자주 위협을 당한다. 생산자들 사이의 가격담합, 카르텔 형성 등으로 말미암아 경쟁의 제한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일찍이 아담 스미스조차 “상인들은 언제나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sup>14)</sup> 우리 나라 경제에서 보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 불공정하게 진행됨으로써 경제력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13) 이정전, 「녹색경제학」, 한길사, 1994, p. 71.

14) Rich, 위의 책, p 145. 재인용.



사익추구가 공공복리를 생성한다는 것도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 무한경쟁의 논리는 철저히 적자생존의 논리로서 경쟁력이 약한 상대의 생존을 위협한다. 경쟁에서 패배하는 자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아니면 국가이든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 본래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것은 사익추구를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더불어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경쟁의 원칙은 사회적 연대(solidarity)의 원칙과 관련되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주체들 간의 협동은 분업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산업경제의 기본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경쟁의 사회적 연대성을 우리는 ‘상생(相生)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경쟁을 통해 상대를 쓰러뜨리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다함께 풍요롭게 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극단적 이기주의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경제체제가 끊임없이 모색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독과점 금지에 대한 법이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시장의 실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시장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하나의 경제제도의 의미를 넘어서 문화적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문화는 고도의 기능성과 합리성 때문에 여타의 사회조직의 원리로 확대되고 마침내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형태로 형성된다. 대학이나 병원 같은 비영리 조직들도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벨(D. Bell)이 지적하듯이 현대사회 문화양식의 핵심은 경제화(economizing)이며, 최소비용에 최대이익 그리고 극대화와 최적화 등을 가치관으로 삼고 그 구조는 관료제와 역할의 전문화 및 분업화다. 그 결과는 인간의 물화(物化)다.<sup>15)</sup>

한편 시장경제 아래서 인간은 ‘시장인간’으로 파악된다. 시장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하는 무계약적 소비자이며 자본축적자이다. 시장인간은 권력인간으로서 타인을 회

15) 이시재, “새로운 문명과 한국의 사회운동”, 「창작과 비평」, 1998/여름, p. 101.

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재산증식을 꾀한다. 시장인간은 화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인간이다. 시장인간은 이윤추구에 관심을 갖는 이성적인 경영인이다.<sup>16)</sup> 프롬(E. Fromm)은 시장인간이란 자신을 시장에 나온 상품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가치를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로서 인식하는 인간이라고 규정한다.<sup>17)</sup>

하지만 시장제도란 삶의 방편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보다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사회문화적 산물이다. 때문에 시장은 절대화되어선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관이 절대화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인간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같은 가치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노동과 성취능력에 따라 평가되어서도 안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자체로 존엄한 가치를 지니며, 그 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오늘날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생산성과 경쟁력이라는 가치가 인간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통용되고 있어 비인간화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원리는 마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과 같이 이해되고 있다. 마치 60-70년대에 '경제성장'과 '수출증대'가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듯이 이제는 시장경제 원리가 IMF시대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전망이다. 그 결과 노동자 인권의 침해나 사회적 약자의 도태, 그리고 환경파괴를 정당화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윤리는 시장경제 원리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윤리성을 상실하게 될 때 야기되는 이데올로기성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예언자적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장은 인간과 사회의 산물으로써 결코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윤리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끊임없는 비판과 수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신학은 이러한 시장경제의 우상성을 폭로한 다음 어떻게 이 시장경제를 보다 인간적이고, 사회적이며, 생태학적으로 조화롭

16) Duchrow, U., 손규태 역, 「성서의 정치경제학」, 한울, 1997, pp. 67-68.

17) E. Fromm, 김진홍 역, 「소유냐 삶이냐」, 기린원, 1989, p. 180.

게 형성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 V.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위한 윤리원칙들

### 1. 인간적 원칙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 1:27)

경제의 인간적 원칙이란 인간을 경제의 수단화하는 대신에 경제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경제의 기준, 즉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판단기준을 인간에 두는 것을 말한다. 경제의 목적은 인간의 삶의 조건의 개선이지 단지 물질 자체의 생산이나 축적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는 단순히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총생산액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느 만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만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는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경제의 인간적 원칙은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인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인간의 욕망에 따라 생활필수품일 수도 있고, 사치품일 수도 있고, 인간과 사회적 삶을 파괴하는 재화일 수도 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이 다 같은 것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적 경제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경제라 할 수 있다.

인간을 목표로 삼는 경제는 절대빈곤의 해결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절대적 가난’이란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최저생계수준에 미달하는 삶을 뜻한다. 질병, 문맹, 영양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절대빈곤은 인간을 철저히 비인간화시킨다. 신학적으로 보면 빈곤의 문제는 단순히 재화의 부족이라는 물질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절대빈곤으로 인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거부요 도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은 타파되어야 할 악이다.

인간적인 경제는 노동의 인간화를 지향한다. 본래 생산요인 가운데 하나인 노동은 인간의 인격과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다른 생산요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오늘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의 합리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테일러주의적인 노동합리화 정책은 인간 노동을 기계적인 활동으로 축소시키고 말았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주체적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작업방식,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 2. 민주적 원칙

너희가 아는대로 민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너희 사이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 20:25-27)

경제의 민주적 원칙이란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참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막는 것을 말한다.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은 다른 경제주체들의 자유권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을 감독해야 할 정부나 정치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론자들은 사유재산권의 인정과 경쟁의 매커니즘이 경제의 민주화를 촉진시킨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유재산권은 경제주체들의 자율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의 바탕이 된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이 소수의 특정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행사될 수 있고 자손에게 상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는 상이하다. 즉 사유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는 경제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sup>18)</sup> 따라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권력자들이 사유재산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시장경제론자들은 경쟁을 통해 기업가에 대해 민주주의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완전경쟁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마치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투표하듯이 상품을 사거나 사지 않음으로써 기업가에 대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기업 경영자들이 경쟁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계획이라는 ‘보이는 손’으로 대체해 버림으로써 대기업 경영자들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9)</sup> 따라서 시장이 민주주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권력을 가진 재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3. 사회적 원칙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갈 5:13)

경제의 사회적 원칙이란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 사이의 연대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를 말한다. 이같은 경제의 사회성은 경제가 사회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사회 전체의 시각에서 보려는 태도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사익추구는 공공복리에 도움이 되며, 경쟁은 협동정신을 촉진함으로써 인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어야

18) 정운찬, “우리 나라 경제의 민주화”, 『문학과 사회』, 1997/겨울, p. 1365.

19) 정운찬, 위의 책, pp. 1365-1366.

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악육강식의 경제형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자기책임·사익이라는 개인적 근본가치들이 사회적 책임·연대·공공복리와 같은 사회적 근본가치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이 없는 개인의 절대적 자유, 사회적 의무를 망각한 절대적 사유재산권, 공공복리를 파괴하는 사익추구는 결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말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경험이다. 하나님의 아가페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이웃사랑은 개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때 이웃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자연세계 그리고 미래세대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둘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모든 재화는 전인류와 미래세대, 그리고 모든 자연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경제의 사회적 원칙은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의 계명에 기초한 연대의식이라 할 수 있다.

경제의 사회적 원칙은 빈부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정치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배정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물론 분배정의를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평등 이데올로기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빈부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정의를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세제도의 개혁과 토지공개념 제도의 강화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중요하다.

경제의 사회적 원칙은 사회정책을 포함한다. 시장경제는 업적 지향적이어서 경쟁력과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준다. 그런데 사회에는 업적을 내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업적을 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실업자들, 병자들,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자들, 노인이나 어린이 등 직업활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 역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의 사회적 연대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갈 6:1), 업적에 따르는 정의만이 아니라 필요에 따르는 정의(행 2:42-47)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 4. 생태학적 원칙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쉼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쉬므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된다(레 25:2-4)

경제의 생태학적 원칙이란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의 공급자로서 그리고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흡수, 정화하는 처리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말미암아 자원이 고갈되고, 자연의 자정능력을 넘어서는 폐기물이 발생할 때 환경문제는 심화되고 그것은 거꾸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제 모든 경제의 성장가능성은 생태계의 객관적인 한계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환경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물론 인간은 주어져 있는 자연을 이용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하는 인간의 권리이다(창 1:28-29). 그러나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나 정복은 환경파괴의 정당화나 절대적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인간은 생태학적 그물망의 한 요소로서 다른 생물체와 운명을 함께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존기반을 파괴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자연이란 단지 인간의 복지를 위한 재료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중앙관리경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결과 환경파괴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 대신에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인구의 증가와 욕구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필요로 한다. 생명체에 있어서도 성장이 멈추면 생명은 끝이 난다. 그러나 모든 성장이 생명에 이바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건은 성장이나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성장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저개발국에서는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제는 ‘성장이나 아니냐’가 아니라 ‘성장의 질’이다.

‘질적 성장’이란 재생가능한 자연자원들을 보다 적게 투입하고, 환경부하를 줄이면서도 성장을 이루는 경제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되, GNP 증가와 에너지나 자원 사용 사이의 연결고리를 단절해야 한다.<sup>20)</sup> 그렇게 하려면 먼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5. 지구적 평등 원칙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시 96:10)

경제의 지구적 평등 원칙이란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의 경제적 차이를 줄임으로써 국제적 차원에서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개별국가 단위의 국민경제들은 세계시장 안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 있다. 이미 생산과 소비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과 금융시장의 지구화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에서의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불균등한 관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만일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아무런 규제나 감속장치 없이 세계경제에 적용될 때 필연적으로 산업국과 저개발국 사이의 빈부격차가 커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 모든 국가들에 공동적으로 경제적

---

20) Binswanger, H. Ch./Jäger, A., "Ökonomie und Ökologie", Sozialwissenschaftlichen Institut der EKD (Hg.), *Zwischen Wachstum und Lebensqualität*, München, 1980, s. 81.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의로운 세계경제 질서가 요청되고 있다.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아도 이래로 국제적 노동분업은 각국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었다. 그들의 견해에 따라서 저개발국은 광물자원과 농산품 등 이른바 1차재화를 생산·수출하는 특화전략을 따랐지만, 산업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수입품 대체와 저개발국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원자재 수출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등한 무역조건의 결과 산업국과 저개발국 간의 빈부 차이가 더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국제적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역조건의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저개발국이 수출하는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한 세계시장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나 여타의 이유를 들어 저개발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한 차별과 같은 조치들이 철회되어야 한다.

다국적기업(혹은 초국적기업)들에 의한 모국으로의 이윤송금 역시 저개발국의 자본부족을 심화시켰다. 오늘날 다국적기업은 경제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정치적·문화적·사회적인 면에서 저개발국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국제적 원칙의 실현을 위해선 다국적기업에 대한 통제를 위한 국제적 혹은 국가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VI 맺는말

시장경제 자체는 도덕적인 것도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장경제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이기심을 허용하는 까닭에 공공복리의 정신보다는 사익추구라는 이기적인 동기가 지배하며, 약육강식의 적자생존 논리가 지배적이게 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환경파괴, 경쟁의 왜곡 등은 부분적으로 그 시장경제 자체의 한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긴 하지만 시장경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 시

장기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위한 논의에서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장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순수시장경제 대신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수정, 보완된 시장경제가 모색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정책(Sozialpolitik)뿐만 아니라 노동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 조세제도, 환경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거시정책의 조정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나 경쟁을 왜곡하는 독과점 체제의 감독도 중요하다. 물론 이때에 국가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당한 권력을 지닌 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정부 역시 도덕성과 전문성에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만 이 일을 맡기기가 어렵다. 때문에 성숙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 견제가 더욱 요청된다. 즉 시장에 대한 감독과 감시는 국가와 민간부문 간의 협력과 상호 견제를 통해 더욱 효과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시장이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외적 개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가 전제하고 있는 도덕성의 실현이다. 시장은 도덕에 의존한다. 시장경제의 원리라 할 수 있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증가와 공공복리의 증가는 경제주체들의 도덕성을 전제한다. 도덕적 전제 없이 이익의 추구가 공공복리의 실현으로 발전할 수 없으며, 정당한 경쟁도 이루어질 수 없다. 경쟁이 효율적 자원분배에 이르게 하는 길이 분명하지만 경쟁참가자 사이에 공정한 게임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대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경쟁의 결과는 모두에게 파멸적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경제는 도덕을 불필요하게 만들 기보다는 더욱 필요하게 만든다.

기독교 경제윤리의 과제는 현존하는 경제제도와 체제를 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작업이나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는 도덕적 이상주의적 작업이 아니다. 오히려 신학적이고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면서 실현 가능한 경제제도와 경제체제를 설계하는 작업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기독교 경제윤리는 경제를 악마화하거나 우상화하는 대신에 어떻게 ‘인간화’할 것인가를 탐구한다. 이것은 물질을 악마화하거나 우상화하는 대신에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청지기’를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노모스가 ‘경제’를 뜻하는 오이코노미아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사실이다. 경제의 목적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며, 시장 역시 사회적 산물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의 일차적 과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탈신성화에 있다. 그것은 곧 시장경제를 인간화라는 윤리적 과제로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윤리적 책임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윤리적 원칙을 내세웠다. 인간적 원칙, 민주적 원칙, 사회적 원칙, 생태학적 원칙 그리고 지구적 평등 원칙이 그것이다. 경제의 인간적 원칙은 경제의 근본목적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물질 조건 마련에 있음을 강조한다. 경제의 민주적 원칙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지향한다. 경제의 사회적 원칙은 개인적 경제이기주의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의 문제를 사회정책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다. 경제의 생태학적인 원칙은 시장경제가 해결할 수 없는 자연 생태계의 문제를 경제의 근본조건으로 삼음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국제적 원칙은 국가간의 경제관계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들 간에는 모순과 대립이 생겨날 수 있다. 어느 하나의 원칙 속에 있는 가치만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원칙이 포함하는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칙만이 절대화되거나 극단적으로 강조되어선 안된다. 이 원칙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모순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치적 과제에 속한다. 특정한 사회,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가치가 보다 더 강조될 수 있는데, 어떤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합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체제에 대한 논의는 열려 있는 과정이지 완결된 체제일 수는 없다.

## 참고문헌

-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 1994.  
럭키금성경제연구소, 「환경과 기업」, 럭키금성경제연구소, 1992.  
세계교회협의회회편, 이영재 역, 「오늘의 세계경제와 그리스도교 신앙」,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1993.  
오호성, 「환경과 경제의 조화」, 조선일보사, 1995.  
이정전, 「녹색경제학」, 한길사, 1994.  
「창작과 비평」 72호, 1991/여름.  
「문학과 사회」, 1997/겨울.  
「역사비평」, 1998/봄.  
Chaussudovsky, M., 이대훈 역, 「빈곤의 세계화」, 당대, 1998.  
*Global 2000. Der Bericht an den Präsident*, Frankfurt a.M., 1980.  
Martin, H. P./Schumann, H., 강수돌 역,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1997.  
Nussbaum, H. v.(Hg.), *Die Zukunft des Wachstums*, Düsseldorf, 1973.  
Rich, A., 강원돈 역, 「경제윤리 1」, 한국신학연구소, 1993.  
Rich, A., 강원돈 역, 「경제윤리 2」, 한국신학연구소, 1995.  
Kirchenamt der EKD, *Gemeinwohl und Eigennutz*, Gütersloh, 1991  
WCED, 조형준·홍성태 역, 「우리 공동의 미래」, 새물결, 1994



### ■ 조용훈 ■

장로회신학대학 및 신대원에서 신학 전공. 독일 Bonn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 취득. 현재 한남대학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주요 연구로는 “개발문제와 기독교 사회윤리”, “지구 환경위기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과 교회의 역할”, “정보사회의 윤리적 도전과 기독교”(『통합연구』 30호), “현대 소비문화와 그리스도인의 삶”(『통합연구』 33호) 등 다수논문.